



보도 일시	2022. 9. 23.(금) 09:40	배포 일시	2022. 9. 23.(금) 08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 <총괄>	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오정윤 (044-215-5610)
		담당자	사무관 고영록 (koyr@korea.kr)

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·공유 확대,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 -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 발표 -

◇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·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·공유하고, 규제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

- (데이터 전면개방)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, 의료,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
- (특허·실용신안 개방)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, 바이오,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%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(경제효과 1조원 규모)
- (공공기관 규제혁신)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, 경제 규제 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

□ 기획재정부는 '22.9.23.(금)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을 보고·확정하였음

-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, 특허, 해외네트워크 등과 같은 유·무형의 자산·역량을 민간에 개방·공유하고,
-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를 내실있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

[추진 배경]

1.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

-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'공공기관 혁신'을 새정부의 국정과제*로 선정하고, 3대 혁신과제**를 추진 중임

* 국정과제 15 :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

** ①생산성 제고, ②관리체계 개편, ③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

- 그 중, ①생산성 제고 및 ②관리체계 개편은 이미 발표하여 추진 중

* (생산성)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(6.30),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(7.29)
(관리체계)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(8.18)

- 세번째 혁신은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민간 성장과 역량 강화,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③협력 강화방안에 초점

2. 민간혁신 ·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

- 공공기관은 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핵심 경제주체로서 거대한 자원·역량을 보유

* 자산('21): 총 969조원, 예산('21): 761조원(정부 예산의 1.3배),
조달·구매('21): 63조원(정부 조달의 1.5배)

- ESG경영, 공급망 충격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

- 그러나, 그간의 민간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,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큰 데이터, 특허 등의 민간 개방 · 공유 노력은 부족한 상황

* (데이터) '13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 → 기관당 60.6건만 개방중('22.8월)
(특허 · 실용신안) 7.0만건 보유 → 1.5만건(21.6%)만 활용중('22.8월)

- 또한, 기존 민간지원 사업들의 비효율적 운영, 규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공공기관이 국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

[주요 내용]

-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서,
 - ‘①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’,
 - ‘②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시너지 극대화’,
 - ‘③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 개편’의
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세우고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을 마련
-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< 1.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 >

① 데이터 개방

- 먼저,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, 부동산,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('22.11월)
 - ‘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/F*’를 설치하여 산업·금융·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, 기관별 원천 데이터**도 개방 확대('23.1분기)
- * 기재부(재정관리관), 데이터 전문가 및 공공기관(NIA) 등 참여하여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, 개방 기준 수립, 각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개방 협의 등 담당
- ** 공공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하위 수준의 데이터 등

<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>

기관명	데이터	기대효과
건강보험심사평가원	MRI,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	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
부동산원	청약/입주물량 데이터	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·이사·가전·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
건강보험공단	인플루엔자, 천식, 아토피 등 데이터	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
철도공사	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	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
LH공사	토지시세 데이터	LH토지 낙찰가,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
국민연금공단	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	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

- 또한,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,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하여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
- 그 외에,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,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적극 유도

② 특허·실용신안 개방

-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·실용신안(5.5만건) 중,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·바이오·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%(1.1만건)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추진
- ⇒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
- 나아가,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시, 그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&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
- 또한, 공공기관 특허·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(경상기술료)으로 최대한 변경*하여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

- * ①(정액기술료)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, 사업화 실패시 큰 부담
- ②(경상기술료) 매출 발생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, 사업화 실패 부담 완화

③ 보유시설·장비 이용 편의성 제고

-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하여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(단, 상시사용·보안 시설 등은 개방 제외)
- *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 1만 2,525개 중 2,673개(21.3%)만 개방 중('22.8월)
-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·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'원스톱 통합예약 체계'를 알리오플러스(alioplus.go.kr)에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

< 2.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지원 시너지 창출 >

❶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
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·기술 구매 플랫폼인 '기술마켓'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까지 추가

<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 >

- ① (개요) 공공기관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, '19년부터 시작
 - 공공기관들이 협업하여 기술제품 공동 인증 → 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→ 공공기관 구매
- ② (실적) 총 55개 기관이 참여, 우수 중소기업 제품 2,897억원 구매('22.2분기 누적)
- ③ (경과) 분야별 순차 개통중: SOC분야('19.6) → 에너지분야('20.10) → ICT분야('21.12)

- 또한, 기술마켓 참여 중소기업에게 R&D인센티브·실증테스트·판로도 추가적으로 연계·지원하고 이를 위한 '통합 지원 HUB'도 구축

❷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 구축

- 민간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, 투자·창업, 자원개발 등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,
 - 사업발굴, 금융지원, 사업시행 등 각 단계별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지원을 연계
- 또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, 해외마케팅 지원, 글로벌 기업 수요 매칭 등 온라인 지원플랫폼을 통한 기관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최대한 지원

❸ 중소기업의 ESG 경영, 온실가스 감축, 안전경영 구축 지원

- ESG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출자기관 및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게 ESG 컨설팅을 실시하고, 환경·윤리경영 준수에 관한 MOU도 체결
- 중소기업이 필요한 환경분야 법·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,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컨설팅

< 3.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>

①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 및 정비

-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실태조사 (10월 중)하여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
- 現 경제 규제혁신 거버넌스*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역할도 강화

* 경제 규제혁신 TF - TF 內 7개 작업반 - 부처별 규제 TF의 추진체계 운영

②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을 쏘 공공기관으로 확대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만 설치·운영중인 기업성장응답센터*를 기타공공기관 까지 확대 설치하고, 규제개선 요구주체를 중견·대기업까지 확대

*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·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'20년부터 설치한 규제 애로 처리창구(총 125개 기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운영중)

③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 강화

-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現 경영평가지표*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 검토,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 실시

* (현재) '기업성장응답센터 운용'만 평가 → (개선) '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,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'으로 구체화

[향후 계획]

- ①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, ②경영평가 편람 개정, ③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여 하반기 내 조치완료할 예정

- ①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혁신지침에 규정('22.10월)
- ② 경영평가 지표에 민관협력을 반영한 「'23년도 경영평가편람」 마련('22.12월)
- ③ 기타 데이터·특허 개방 관련 부처 협의 등

※ (별첨)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

기획재정부 <총괄> <해외진출> <기술마켓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오정윤 (044-215-5610)
	공공혁신과	담당자	사무관 고영록 (koyr@korea.kr)
			사무관 박중민 (pymwm@korea.kr)
			사무관 임강빈 (potatomato93@korea.kr)
<ESG 경영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고재신 (044-215-5510)
	공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가순봉 (07mmuser@korea.kr)
<규제애로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정유리 (044-215-5530)
	공공제도기획과	담당자	사무관 박주현 (zoopark@korea.kr)
<특허 등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육현수 (044-215-5630)
	재무경영과	담당자	주무관 김선주 (sweetsj@korea.kr)
<데이터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김수영 (044-215-5620)
	윤리경영과	담당자	사무관 이채영 (pororing@korea.kr)
<시설 · 장비>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김의영 (044-215-5650)
	경영관리과	담당자	사무관 손현석 (ortin4@korea.kr)